

고졸 청년들, 공공 기관에서 역량을 발휘하다

-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 하반기중 550여명 고졸 청년 채용 계획 -
(금년 하반기부터 '14년까지 고졸자 3,600여명 신규 채용 추진)

문의 | 지식경제부 행정관리관(02-2110-5244)

-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EPCO) 등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은 금년 하반기중 총 550여명의 고졸 청년들을 채용하기로 함
 - 아울러 2014년까지 약 3,600여명의 고졸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 8. 15 경축사의 공생발전과, 9. 2일 열린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확대 등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은 금년 하반기중 550여명의 고졸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 * 한국수력원자력 : '11년 하반기중 300명 이상을 고졸로 신규채용 예정
 - * 동서발전 :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의 직군중 30%를 고졸 채용
 - 각 공공기관들이 직무분석을 통한 고졸 채용가능 직무 발굴, 공공기관 - 마이스터고간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관계 부처(기획재정부)와의 소요 정원 협의 등을 통해 2014년까지 약 3,600여명의 고졸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키로 함
 - *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과 마이스터고간 협력 MOU 사례
 - 남부발전(부산기계공고 등 3개), 서부발전(인천전자고 등 5개), 한전KPS(수도전기공고), ETRI(동아마이스터고), 생산기술연구원(마이스터고 협의회) 등
- 8. 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공생발전 취지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지난 9. 1(목) 장관주재 60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이 자리에서 지경부는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이 없는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업무효율성과 고졸자에 대한 성장기회를 고려하여 엄격한 직무분석을 통해 고졸 청년채용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60개 공공기관장 모두 공감한 바 있음
- 현재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중 고졸 출신 근무인력은 현재 22%수준이며 금년 상반기 고졸 기채용 인원은 전체 2,500여명의 신규 채용자중 13%인 33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경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은 학력보다는 능력이 중시되는 기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규 채용의 20% 수준 이상 우수 고졸 청년들이 신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 한편,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선진화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졸 채용확대를 위한 정원 증원이 필요하며 고졸 채용 인력의 균복무 등으로 발생한 정·현원 차이에 대해 융통성 있는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고용부,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집중점검 -

문의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02-6922-0951)

-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실수가 없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 ◎ 근로자도 사업주가 이행토록 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건설업의 재해율은 '07년부터 0.65% 내외에서 정체하다 '10년 0.70%로 상승하고 재해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 건설업 재해자: 19,385명('07년) → 20,835명('08년) → 20,998명('09년) → 22,504명('10년) → 11,712명('11.7월말)
 - ◎ 따라서 건설재해를 예방하려면 노·사의 안전보건기준 준수와 기본적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이 중요하며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 이번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 이번 점검은 10월중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으로
 - ◎ 대상은 ▲ 11~12월중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 근로감독관이 출장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 점검에 앞서 10월중에는 지역별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보호구착용 캠페인(24회)을 개최하고
 - ◎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안전공단 지도원장 등이 참여하여 현수막 달아주기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며 - 현수막 5,000개를 제작,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안전보건지킴이 등이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설치해 주기로 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중 지붕위에서 추락하거나 틀비계 및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는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 ◎ 내년부터는 매월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풍토 조성 및 보호구 착용 생활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기준 깐깐해진다.

- ① 가전제품 효율강화 : 1등급 비율축소, 에너지 프론티어 신설
- ② 효율정보 비교사이트 개설 : 효율등급, 에너지비용 정보제공
- ③ 서민 전기료 절감 유도 및 전력피크 완화 : 전열기 ⇒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
시스템 에어컨 ⇒ 효율등급제 전환
- ④ IT기기 효율강화 :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효율등급제 편입
- ⑤ 저효율 산업모터 퇴출 : 산업모터(국가전력 40% 점유) 효율 강화

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02-2110-3943)

-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이 제품성능 경쟁을 가속화하고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됨
 -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효율 1등급 판정기준을 높여 30%를 초과한 주요 가전제품 1등급 비율을 10%내외로 축소 조정하고,
 - 에너지 효율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비교사이트(가칭 “효율바다”)를 개설하는 한편
 - 난방용 전열기와 시스템 에어컨의 효율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 금년 11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작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밝힘
-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9. 5~9. 14일)후 입안예고 예정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판정기준 강화

- 주요 가전제품의 1등급 비율을 50%대에서 10%내외로 축소함

구분	냉장고	T V	전기밥솥	세탁기
전력소비 비율	21%	17%	11%	5%
1등급 비율	소형 36%, 대형 95%, 김치 60%	-	32%	49%

- 적용대상과 시행시기는 전력소비 비중, 1등급 비율, 최근 효율기준 개정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우선 냉장고, 전기 냉난방기(1등급 61%)는 금년 11월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가정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TV는 내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효율등급제 대상에 편입

에너지프론티어 제도 신설

- 가전업체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효율기준을 맞추기 위한 단기 기술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 세계시장을 겨냥한 미래지향적 투자와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함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중장기 효율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에너지 프론티어(Energy Frontier) 제도를 도입
- 현행 기준보다 30~50% 높은 효율목표를 3년 주기로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한 제품은 최고 효율임을 입증하는 인증마크 부여
- 내년 1월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

에너지 효율정보 비교사이트(가칭 “효율바다”) 개설

- 금년 연말까지 주요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연간 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사이트가 개설됨
- 에너지 효율정보는 정부의 효율정보 제공기능과 민간의 창의력을 서로 조합(組合)한 형태로 추진됨
- 정부는 1만 3천여 품목의 가전제품과 승용차에 대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과 연간 에너지 비용정보를 유사 상품群 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에 공개
- 민간부문은 공개된 에너지 효율정보를 가공하여, 제품가격, 성능정보와 하나로 묶어 제공하거나
 - 스마트폰 등 최신 IT기기를 활용하여 여러 형태의 비교 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TV, 진공청소기, 가스보일러

- 제공정보 : LED, LCD, PDP 등 / 크기(인치) (분류기준)
- = 정부 사이트(효율등급, 연간전기로, 월간소비전력량) + 민간전문사이트

〈자동차〉 :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3.5톤 미만 화물차 등 연비표시 대상차량

- 제공정보 : 연료별(휘발유) / 기능별(SUV) / 배기량(cc) (분류기준)
- = 정부 사이트(효율등급, 연비, 연간유류비) + 민간전문사이트

- 금번 대책은 출입 기자단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정책화한 첫 케이스로서, 언론과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머리를 맞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름

서민 전기료 절감 유도 및 전력피크 완화

- 내년부터 서민, 소상공인들이 주로 구매하는 전기온풍기, 스토브에 대해 최저소비 효율기준이 적용되어 저효율 제품판매가 금지됨
- '12. 1월부터는 월간 에너지비용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전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나감
 - * 전기난로·스토브 등의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서민의 전기료 피해사예 예방
- 겨울철 전력피크 완화를 위해 시스템 에어컨(EHP)은 용자지원, 공공기관 납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대상으로 전환('12.4)

품 목	전력피크 비중	전기난방 비중	보급대수
시스템 에어컨	6%	23%	140만대
전기 온풍기	6%	23%	120만대
전기 스토브	4%	16%	640만대
계	16%	61%	

IT 기기 효율강화

-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확장으로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30%이상 전력 절감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효율관리 기준을 새로 도입
- 데이터센터용 서버, 스토리지는 미국의 효율기준 도입시기와 연계하여 '12년부터 효율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 데이터센터 단위의 그린 인증제도도 '12년부터 시범 운영키로 함

저효율 산업용 모터 퇴출

- 국가 전력량의 40%를 차지하는 삼상 유도전동기(이하 산업용 모터)에 대한 효율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됨
- 저효율 산업용 모터는 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하고, '1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프리미엄급(IE3급) 생산·판매를 의무화
 - '12년부터 3년간은 임의인증으로 IE3 마크를 부여하고, '15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적용
- ▲ 에너지효율에 따라 일반전동기(IE1) → 고효율전동기(IE2) → 프리미엄 전동기(IE3) 순으로 분류(IE3는 IE1 보다 7%, IE2보다 2% 높음)
- ▲ 우리나라는 '08년부터 IE2급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적용중이나, 미국·캐나다는 '11년, 유럽·중국은 '15년부터 IE3급 생산·판매 의무화 추진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정부에서는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통해 '20년까지 1조 5천억원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금번 대책은 지난 8월에 발표한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개선”에 이은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임
- 지경부는 “앞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본격시행과 더불어, 교육분야와 종합병원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 대책을 수립하는 등 경제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 국가 온실가스 목표달성과 녹색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밝힘